

尹 탄핵심판 역대 최장기간 평의... 이번주 후반 결론 전망

속고 기간 길어지며 여론 과열양상 장외투쟁 등에 정치권 '올스톱' 상태 판결문 다듬기에 시간소요 예상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심자각 앞에서 열린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15차 범시민대행진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1

16일 기준으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을 접수한 지 93일째가 됐지만, 탄핵심판 선고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과거의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긴 시간을 속고하고 있는 현재가 이번주 중후반에 선고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은 지난 달 25일 종료됐다. 이날(16일)로 변론을 마친 지 20일째가 됐지만, 선고기일 통지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변론종결 이후 기간으로 봐도 노무현 전 대통령(14일)과 박근혜 전 대통령(11일)을 넘어섰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기간 평의를 갖는 것이다.

현재는 변론종결 이후 후일을 제외하고 매일 수시로 쟁점을 논의하는 평의를 열고 있다. 당초 지난주 후반(13·14일)쯤 선고할 것으로 예상됐지

만, 현재의 속고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문제는 현재의 속고가 길어지면서 여론 역시 과열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주 내내 '빠른 파면 선고'를 요구하며 장외투쟁 등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을 먼저 선고하라며 목소리를 높인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석방됐고, 조기 대선을 예상했던 여권 대선주자들의 공개 행보는 사실상 멈추는 등 정치권이 '올스톱'된 상태다.

이에 야권에서는 이번주 초에라도 판결이 나오길 기대하는 모양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8대0 인용 만장일치부터 6(인용)대 2(기각), 4대 4 등 다양한 가능성이 거론된 속칭 '지라시(정보지)'가 난무하고 있다.

그러나 탄핵심판 관련 평의는 헌법재판관들만 참석하고 도청 방지 장치를 설치하는 등 '철통 보안' 상태라, '어떤 재판관이 무슨 의견을 냈다' '몇대 몇이다'라는 정보는 사실상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그렇다면 현재 판결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각에선 현재에 윤 대통

령뿐 아니라 다수의 탄핵 사건이 동시에 걸려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다른 탄핵 사건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 검사,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등 탄핵 사건이 여러 건이었다. 경찰청장 탄핵심판 변론기일은 아직 날 짜도 잡지 못했다.

다만 현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여러 건의 탄핵심판을 동시에 심리할 것은 아니라는 반박도 있다. 이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석방 등이 영향을 준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현재 8인 체제인 현재는 '만장일치'로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는 인용과 기각이 4대 4로 나뉘었지만, 최근 선고를 내린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안은 8인 전원 기각 의견을 내놨다. 이는 윤 대통령 탄핵안도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앞서 현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진행 과정을 결정할 때도 '재판관 전원의 의견 일치'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런 차원에서 현재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판결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파면 사유가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을 꼼꼼하게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날(15일) 인터뷰에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있으면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은 대통령도 파면된다"면서 "다만 탄핵 찬반 여론이 워낙 과열하다 보니 재판관들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판결문을 쓰느라 문구를 다듬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현재가 이번주 후반쯤인 20·21일 선고를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헌법상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만약 3명 이상이 기각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업무에 즉시 복귀하게 된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美 민감국가에 韓도 포함... 정치권 책임 공방

與, '자체 핵무장론' 언급 등 영향 野 "與 경거망동에 경제 퇴행될 수도" 내달 15일 전까지 지정 해제 총력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막판에 대한민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시켰다는 게 공식 확인되면서, 정치권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감국가 목록 등재란 개인 단위는 물론 기업과 국가 수준의 교류까지 제한되는 조치로, 한국이 포함된 범주는 민감국가 목록 중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다.

한미동맹 역사상 전례가 없었던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의 연구자들이 미 에너지부 관련 시설이나 연구기관을 방문할 때마다 미 에너지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미 정부 관계자는 한미 양국 과학 교류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공식 언급했으나, 민감국가 목록

포함에 따른 심리적 위축 등의 영향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립외교원장 출신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16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SCL 지정은 윤석열 정부 들어 일련의 사건들이 이어진 결과 나온 '미국의 경고'라고 분석했다.

또한 정치권이 탄핵 정국 속 조기 대선 가능성이 나오자 안보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으로 '자체 핵무장론'을 띄우고 있다며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형 의원은 "(한국 핵무장론을 주장하는)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 선임 연구원 기소 사건, 한미 '워싱턴 선언' NPT(핵무기확산금지조약) 준수 조약 삽입, 윤 대통령의 국방부 업무 보고 '자체 핵무장론' 언급, 윤 대통령의 한미 공동 핵무장 구상 발표 등 바이든 행정부가 '안 되겠다' 싶어서 내린 조치인 듯 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부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 의지가 없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기 여권의 대선 후보인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은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에 따른 대응과 트럼프 행정부 대미 협상 카드로 활용하기 위해 한국 핵무장론에 긍정하는 상황이다.

원내대표 출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유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자위권적 핵무장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국정원 제1차장 출신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은 스스로 핵무장을 금기시하는데, 이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김준형 의원은 국제 통상이 큰 축을 차지하는 대한민국 경제에서 핵무장 추진에 따라오는 경제적·외교적 손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제사회에선 이란과 사

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위험 국가를 한국으로 보고 있다"며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을 믿을 수 없으니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논리를 국민에게 호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통상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큰일 난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방차관으로 임명된 엘블리지 콜비가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한 한국의 핵무장 옵션을 제시한 바 있으나, 역설적으로 미국이 한국의 핵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NP-T나 유럽 등 다른 국가에 위험 국가로 분류된다. 양쪽에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레버리지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위험하다"고 했다.

외교 정상 채널이 가동되기 힘든 탄핵 정국에서도 정부와 의회가 힘을 합쳐 오는 4월 15일 전까지 민감 국가 목록 지정 해체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경제안보특위 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가안보, 핵비확산, 지역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등 민감국가 지정 사유를 감안하면 해제의 길이 보인다"며 "또한, 국민의힘은 입을 다물어야 한다. 선부터 핵무장론으로 경거망동했다간 대한민국의 핵잠재력뿐만 아니라 경제전반이 퇴행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민감국가 목록 포함을 두고 "당장 한미 간 기술협력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여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정부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관계 기관과 긴밀 협의 중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동시에 직무정지 상태에 놓인 대행의 대행 체제에서 이런 외교 통상 문제에 대해 고위급 차원의 신속한 긴밀한 대응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국이 이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선 비판을 달게 받겠다고도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정무위, 내일 '홈플러스 사태 긴급현안질의' 진행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불출석 전망

국회 정무위원회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조만간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현안질의에서는 최대 주주인 MBK파트너스의 배임 논란 등 각종 의혹과 책임론이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사모펀드의 포트폴리오 회사 경영과 관련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올 전망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오는 18일 '홈플러스·MBK파트너스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앞서 사모펀드(PEF)인 MBK파트너스가 대

주주로 있는 홈플러스는 지난 4일 서울 회생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MBK파트너스는 회생 절차 신청 직전까지 개인과 기업 등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어음(CP) 등을 판매해왔다.

이에 여야는 지난 11일 협의를 통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 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 대표,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 강경모 홈플러스 입점협회 부회장 등 5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무위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홈

플러스 노동자와 입점업체들의 피해가 커지며 '제2의 티메프 사태'가 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현안질의에선 회생 절차 신청 직전까지 CP를 판매한 것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자구 노력 없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데 대해서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또 MBK파트너스 등 사모펀드 업계 전반의 경영 실태와 관련해 질문이 나올 전망이다.

다만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이번 현안질의에 출석하지 않는다. 김 회장은 지난 14일 정무위원회에 해외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담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홈플러스 전담채 사기발행 중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는 "투자가 완료된 개별 포트폴리오 회사의 경영에는 관여하고 있지 않아 의원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 충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할 것이 염려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정무위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예진 기자